꼬막까지… 원산지 미표시 日 수산물 판친다

전남도 지난해 단속건수 66건 … 대부분 일본산

후쿠시마 사고 후 싼 가격 나와 … 합동단속키로

전남에서 참돔, 갈치, 농어, 꽃게 등을 구입하려면 원산지를 꼼꼼히 살펴야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 완도, 무안 등 수산물 거래 규모가 큰 지자체에서는 원산지 표시도 없이 시장에 내놓았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줄면서 싼 가격에 원산지 표시 없이 진열되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등은 물론 최근에는 꼬막에 이르기까지 일본산 수산물들이 우리 수산시장 한 켠을 차지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남도가 설 명절을 대비해 최근 4년간 원산지 단속에 나선 결과 지난 2012년 36건에서, 2013년 46건, 2014년 57건, 2015년 66건으로 매년 10건 내외가 증가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운 거짓표시는 없고 모두 5만~10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미표시다.

문제는 이들 미표시의 대부분이 일본산이라는 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꺼리자 싼 가격에 표시 없이 내놓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2년간 전남도의 단속 결과에 따르면 여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완도(27건), 무안·장흥(8건), 목포(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표시 수산물은 농어, 문어·건문어 각각 8건, 갈치 6건, 돔 5건, 갈치 4건 등이었으며, 꽃게, 명태, 숭어, 장어, 가리비, 키조개 등은 물론 전복, 꼬막, 홍합, 홍어 등도 최근 목록에 등장했다. 특히 최근 꼬막 가격이 오르면서 알이 굵은 일본산 꼬막이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대에 자주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2월 5일까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시·군 담당직원은 물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여수·완도지원 등 3개반 28명이 참여하는 수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꽁치,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대중성 어종과 참돔, 꼬막,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 등 일본산 수산물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은 설 명절 이후에도 전남도 수산물의 신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국산보다는 일본산 수산물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며 "시·군 교차단속은 물론 단속 횟수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누가 총선 후보고 누가 구청장 후보야?"

광주 동구, 총선·구청장 재선거 입지자 20명 육박

대부분 전직 공무원·시구의원 … 유권자들 헷갈려

4·13 총선과 구청장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광주시 동구 지역구에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출마예정자들만 20명 가까이 달하는 등 입지자들이 난립하면서 유권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지역민들은 누가 총선 후보이고 구청장 후보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헷갈려 하고 있다. 특히 유권자들 사이에선 총선·구청장 출마예정자 대다수는 전직 공무원 또는 시·구의원, 정치인으로 후보간 차별성이 없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4·13 총선 출마예정자는 현역인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양향자 삼성전자 상무, 이병훈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 전 이사장, 정영재 인권재단 대표 등 5명 정도다. 또 동구청장 후보는 김영우(전 시의원)·문팔갑(전 광주시교통약자지원센터 본부장)·안재경(전 광주경찰청장)·양혜령(전 시의원)·오형근(성형외과 원장)·윤진보(전 목포부시장)·이선순(동구의회 의장)·임택(시의원)·정종해(전 보성군수)·조용진(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최현주(전 광주시 비서실장)·홍기월(동구의원) 등 12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동구에서만 18명의 출마예정자가 거론되고 있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입지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총선과 재선거가 겹친 동구에 출마예정자들이 난립하면서 대인·남광주시장 또는 동구청 앞 교차로 등 인파가 붐비는 곳엔 이들의 명함돌리기와 거리인사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출마예정자 한 명당 가족·선거운동원 등 4~5명이 선거운동에 나선다고 가정하면 한 장소에 최대 90명 가량이 모여 선거운동을 벌이는 셈이다.

특히 입지자들이 대거 선거에 뛰어들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당 돌풍과 선거구 미획정 등으로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다, 특정 입지자가 총선후보인지, 구청장 후보인지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또 이번 총선·재선거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후보가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과열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마예정자들이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정책 선거보다는 자극적이면서도 시선을 끄는 네거티브 선거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민 정모(40·동구 학동)씨는 "후보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누가 누구인지 모를 지경"이라며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각 당별로 하루빨리 후보자를 선택, 정책선거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유해물질사업장 11곳 점검

광주시·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시는 21일부터 29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관내 유해화학물질 다량 사업장 11곳을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지난해 광산구의 한 전구 공장에서 발생한 수은 유출사고와 관련해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물질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특정유해물질을 사용하고 배출하는 전구, 반도체, 전기, 전자 관련 사업장 등이다.

광주시는 단속이나 규제보다는 사용 유독물질 종류, 사용량, 특성 등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을 권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관내 유독물질 대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충장동 주민센터 개소식 윤장현 광주시장과 홍화성 동구청장 권한대행 등 내외빈이 19일 광주시 동구 충장동주민센터 개소식에 참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지상 3층 규모(연면적 871㎡)인 충장동주민센터엔 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등 행정·교육·문화 공간이 갖춰져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전남도 토지, 여의도 면적의 1.3배 늘어

〈118만평〉

정부 교부금 산정때 유리

전남도의 토지 면적이 2015년 12월 31일 기준 1만2312㎢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보다 여의도 면적(2.9㎢)의 1.3배인 3.9㎢(약 118만평)가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토지 자산 가치는 2015년 전남 평균 공시지가(8155원/㎡)로 추산할 경우 약 318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가 6998㎢(56.8%)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 3219㎢(26.1%), 도로 430㎢(3.5%), 대지 292㎢(2.4%), 기타 1373㎢(11.2%) 등이다.

주요 증가 원인은 목포시 달동 신외항, 남항, 북항 등 신규 등록 0.9㎢, 광양시 황길동 등 공유수면매립 및 토지개발사업 2.1㎢, 기타 보성군, 해남군, 장성군 외 등록사항 정정 0.9㎢ 등이다.

전국 대비 전남의 토지면적은 경북(1만9030㎢), 강원(1만6874㎢)에 이어 3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지수로는 경북(5660필지), 경기도(4752필지)에 앞선 5729필지로 부동의 전국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면적 증가는 자산 가치 증대와 함께 정부 교부금 산정 시 기준으로 유리하게 작용된다"며 "도민의 눈높이 맞춤형 토지정책 실현으로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토지 관련 각종 통계는 누리집(www.jeonman.go.kr) 토지관리과를 통해 공개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삼성전자 생산라인 이전 반대" 뒷북 성명

언론보도 2주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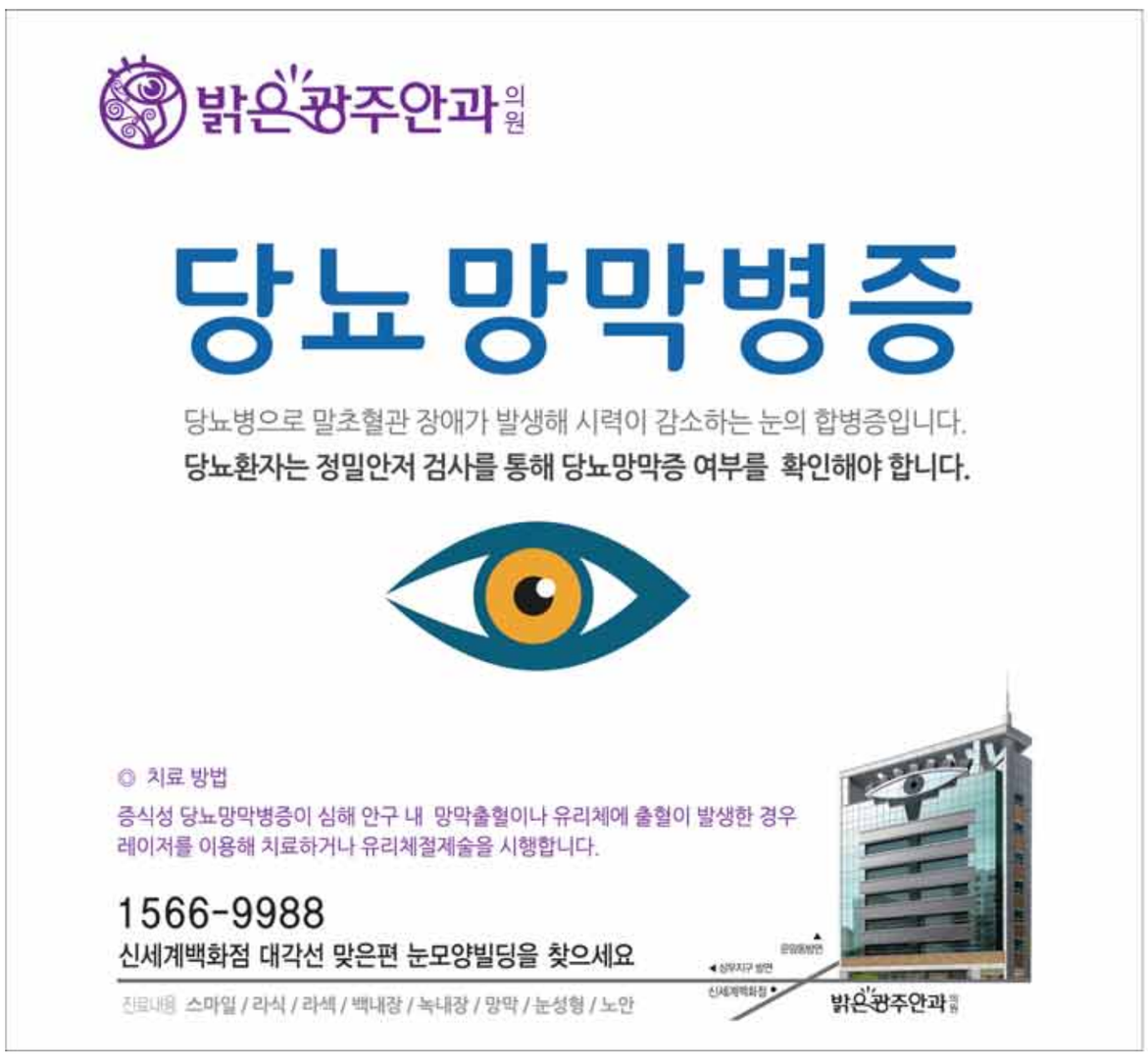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냉장고 생산 1개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키로 해 지역경제에 파장이 예고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뒤늦게 생산라인 국외이전 반대 성명을 내놔 뒷북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광주시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라인 국외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 일동 명의로 "지역경제와 협력업체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삼성전자가 백색 가전제품 생산라인 일부를 아무런 대책 없이 국외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민에게 큰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2014년부터 베트남 호치민시에 3조원을 투자해 70만평방미터 가전공장을 2016년 7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면서 "이번 생산라인 이전으로 광주사업장에서 20% 생산물량이 감소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라인의 추가 이탈, 실업발생과 협력업체의 도산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성명은 지난 5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냉장고 생산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 2주일만으로 뒷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2주일전 삼성전자 광주공장 라인 이전이 언론에 보도될 당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시의원들이 이미 이전 계획이 발표된 뒤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